

7대
안전무시관행
근절을 위한
토크쇼

1-1 안전보안관 제도의 개요 (전체3분)

[사회자] 우리 주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함. 이에 따라서 새롭게 안전보안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도입 취지 등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드립니다.

[지사님]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,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·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하였음. 이로 인해 사회 전반의 안전 위기의식이 증대됨.

- 안전 불감증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무시 7대 관행이 있음. 이 안전무시 7대 관행에는 불법주정차,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, 과속운전, 안전띠(어린이 카시트 포함)미착용,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,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, 구명조끼 미착용이 있음.

1-2 안전보안관 제도의 개요 (3분)

[지사님] 이러한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들을 적발·신고하여, 법·제도 개선,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안전 문화·인식 개선을 위해 전문성 있는 도민들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제가 도입됨.

- 안전보안관들은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비롯한 안전 위반행위 및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고,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됨.
-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안전보안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, 4월에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구성·운영 계획을 수립했고, 시·군별 안전보안관을 600여명 선발했음. ○ 또한 이 분들에 대한 안전보안관 양성 교육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음. (현재 총 416명 교육 수료)
- 이와 같은 교육 이후에 안전보안관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고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근절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임.

#2-1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방향(전체 3분)

[사회자] 그런데 안전보안관이 신고하고 고발하는 것이 이웃들 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. 불법주정차 등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음.

[지사님] 사회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함.

○ 그 지역에서 선발된 안전보안관이 이러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 간 마찰이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. ○ 따라서 시·군 간 교차해서 시찰하고 신고토록 안전보안관제를 운영하고자 함. ○ 무엇보다도,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신고를 통한 규제나 처벌 보다는 의식의 전환, 즉 우리의 안전문화를 바꾸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.

#2-2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방향(3분)

[김근영]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신고나 고발역할에 머물지 않고, 주정차 위반이 많은 곳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규제봉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역할까지도 아울러야 할 것임.

#3-1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(전체6분)

[사회자] 안전보안관이 발족된 이유는 결국 안전무시 관행 때문임.

- 안전무시 관행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서, 제천화재, 밀양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진화에 걸림돌로 지적된 것이 불법주정차문제, 비상구 물건적치 문제였음.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특히 불법주정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.

[박동균] 의식적인 부분을 바꿀 필요는 반드시 있음. 내가 조금 편하자고 만일의 사태를 가볍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을 반드시 고쳐야 함. 주정차 카메라가 있는 곳은 주차를 안 하는 것만 봐도, 단속이나 규제도 적정한 선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. ○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들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 해야 함.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도 함.

#3-2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(6분)

[이동규] 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특히 많음. 부산광역시의 경우 거주지역 주차난 때문에 골목 안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, 이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방법을 적극 찾고 있음.

-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.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러한 대책들도 무용지물임.

#3-3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(6분)

[양기근] ○ 보안관의 역할이 신고, 고발자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으려면, 규제만 생각해서는 안 됨. 주정차 위반이 많은 곳이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고, 공영주차장의 있는데도 사람들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한다면, 접근성 문제 등도 따져봐야 할 것임. 주차 금지봉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임.

○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이 항상 문제임. 하지만 조금만 생각의 범위를 넓히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것들이 많음. 이런 해결방법과 관련해, 우리 도민분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적극 발굴하여 수용해야 할 것임.

#4-2 전문가 안전보안관 확대(4분)

[박동균] 직능관련 협회들도 마찬가지임. 요식업이든 숙박업이든,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임. 이러한 곳에서도 자발적으로 안전보안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.

[사회자] 위와 같은 방법들이, 안전보안관의 역할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데 도움이 됨. 업계의 안전사고 문제는 업계에서 잘 알고 있고, 솔루션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.

#4-1 전문가 안전보안관 확대(전체4분)

[사회자] 우리가 안전충남2050을 만들 때, 사업주에게 안전교육을 시켜, 사업주가 그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, 또 직업군 별로 그 협회에서 그 업계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을 제안한 적이 있음. 안전무시 7대 관행 중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를 보니 그 생각이 남.

[김근영]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해서, 건설현장과 같은 곳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함. 전기, 가스 등 분야의 베테랑들도 안전보안관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음.

#5-1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(전체 7분)

[사회자] 신고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. 이러한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 지 알 필요도 있음.

- 지금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도 담당부서가 예산부족으로 처리 불가하다는 결론을 올리면 그것으로 끝임. 이러한 신고자료들도 축적되면 데이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, 이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면 지역 안전관리에 이보다 좋은 민의 반영이 없음.

#5-2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(7분)

[양기근]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은 자치단체에 맡기고 있음. 중앙정부는 제시만 할 뿐이고, 지역이 지역특성에 맞도록 운영방식을 잘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함.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.

[박동균] 위원회 같은 것도 좋음. 요즘 정부에서 위원회 활용 사례가 많음. 충남도 이런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사례가 많다고 들었음. 안전충남비전위원회도 좋은 예임. 전문가들과 도민이 숙의하는 공간만 제시해 줘도 도가 하는 역할의 반 이상을 하는 것이라 봄. 큰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님.

#5-4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(7분)

[이동규](제안) 실무를 전담할 수 있는 간사 기관을 두어야 함. 충남은 재난안전연구센터 같은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. 실제 안전비전 위원회를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, 관이 꼭 해야 한다는 것 역시 고정관념임.

[지사님] 가칭 “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”정도가 될 수 있겠음.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충남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들임에도, 재난안전과 관련된 충남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셔서 조금 놀람.

○ 요즘은 중앙에서도 소통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음.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고, 도민들이 문제점을 발굴하였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함.

#5-3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(7분)

[사회자] 여기 오신 안전보안관 분들과 전문가 그룹을 매칭시켜 숙의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·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. 그분들이 신고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니까, 그런 부분을 해결할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게 해주어야 함.

[사회자](문제제기) 그런데 위원회조직은 운영의 흐름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게 중요함. 담당 공무원이 바뀔 경우 달라지는 위원회를 많이 경험함. 아쉽지만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1년 주기로 바뀌기 때문에,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임.

#5-5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(7분)

[지사님] ○ 그것이 정책적인 책임성과에도 맞음. 보안관의 역할은 앞서 말한 대로 신고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해결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런 “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”가 될 것 같음. 위원회 운영방식도 동의함.

- 충남이 전국최초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, 충북·대구·경북에도 이런 센터가 있지만 우리 충남이 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 중임.
- 연구기능도 활발하고 안전비전을 만들면서 주민들과의 스킨십 경험도 있으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함. 위원회가 간사역할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주민, 도와의 연계가 잘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.

#5-6 안전보안관 정책위원회 발족 제안(7분)

- 참고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안전관리의 연속성 저하 문제를 해결코자, 우리도의 안전부서 공무원은 2년 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음.

#6-2 어린이 카시트 임대사업 제안(안전과 복지의 결합-지역형 안전복지) (5분)

[이동규] 저소득층에서는 카시트 구입하는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많음. 실제 우리아이가 5살인데 나도 사 보니 비쌌음.

- 보안관들이 지역에 봉사하고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들임.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꼭 신고하고 고발하는 일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. 지역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게 안전보안관 추천으로 이런 카시트 구입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임.

#6-1 어린이 카시트 임대사업 제안(안전과 복지의 결합-지역형 안전복지) (전체 5분)

[사회자] 여기 소방 관련된 교수님 말고 경찰 관련 교수님도 계시는데 교통과 관련된 안전무시 관행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[박동균] 교통 사고 관련해서는 노인 보행 사고 못지않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이 높음. (사망률 제시) 요즘 저출산이 문제인데, 낳은 아이들은 안전하게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함. 미국은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우리는 아직 엄마가 안고타는 데 익숙한 것 같음.

#6-3 어린이 카시트 임대사업 제안(안전과 복지의 결합-지역형 안전복지) (5분)

[양기근]○ 모두 구입해 주는 직접 복지가 어렵다면 임대사업도 좋음. 시군 읍면을 통해서 카시트 임대도 적극 추천함. 이런 것은 카시트 사업자와 결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. 실제로 아기들이 크면 성장 주기에 따라서 카시트도 바꿔야함. 책도 빌려주고, 장난감도 빌려주는데 카시트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.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.

[지사님] 전적으로 동의, 임대사업 도입 검토해보겠음.

#7-1 운영조례 제도화 방안(전체 3분)

[사회자] 안전보안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. 법적인 근거도입 필요함.

[이동규]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음. 도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조직이나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.

#7-2 운영조례 제도화 방안(3분)

[박동균] 제도화가 꼭 필요함. 전담조직, 예산 지원방안 이런 사항들을 운영조례 형태로 법정화 하는 과정이 필요함.

[지사님]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법제화 추진 중(입법예고 중)이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함.

- 이제는 참여의 시대임. 특히 안전분야는 도민 참여 없이 완성을 말하기 어려운 분야임. 이와 관련하여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,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안전보안관 여러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겠음.
- 앞으로도 우리 도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,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충남의 안전에 한배를 타신 것임. 함께 안전충남을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람.